

바람직한 교수 임용은 대학의 자율적 · 민주적 운영에서만 가능하다

황 상 익 |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I. 들어가는 말

필자는 교수 계약제 · 연봉제를 반대하며, 이 잘못된 제도는 지금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필자 개인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전국국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대학교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전국적인 교수 · 학술단체의 공통의 방침이다. 그리하여 위의 7개 교수 · 학술단체는 지난 1월 7일 '교수 계약제 · 연봉제 철폐를 위한 전국교수투쟁본부'를 결성하여 이 잘못된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사업과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교수들에 대한 계약제 · 연봉제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 대한 계약제 · 연봉제를 반대하며 거부한다. 그것은 계약제 · 연봉제가 그 제도에 예속되는 (교수)노동자 등 모든 인간들의 고용 조건 · 노동 조건 · 근무 조건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인간들을 파편화 · 분절화시켜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며, 결국에는 그 제도의 신봉자들이 내세우는 효율성도 오히려 저하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계약제 · 연봉제는 현대판 노예제에 다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학사회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필자 역시, 그리고 우리 교수노조도 그러한 지적에 동의한다. 원칙적으로 말해 교수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대학사회의 문제점 여부나 다과와 관계없는 헌법적 권리의 행사이지만, 우리들이 교수노조를 설립한 것은 문제점 투성인 대학사회를 올바르게 개혁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교수노조는 설립 취지를 "온갖 모순으로 신음하는 대학사회를 개혁하여 이 땅에 참대학을 건설하기 위해, 또 그러한 개혁에 필수적인 교수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수입 학문을 벗어나 진정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우리 학문을 정립하기 위해"라고 표현한다. 필자는 금년부터 정부의 주도로 강행되고 있는 교수 계약제 · 연봉제가 대학사회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교수들의 노동 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며, 우리 학문의 모습을 더욱 왜곡시킬 것으로 판단한다. 즉 교수노조와 교수 계약제 · 연봉제는 결코 병립도 공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II. 대학교육의 문제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일반 여론까지도 대체로 우리 대학교육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제대로 된 대학교육을 받기 위

해서는 이민이라도 가야겠다고 하며, 실제로도 최근 들어 외국 대학 입학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과 현상에 대해 부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잘못된 대학교육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진단, 그리고 처방에는 동의할 수 없는 점이 많이 있다. 교육 당국과 일부 언론에서는 주로 대학교수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며, 그 해결책으로 교수 계약제·연봉제를 제시한다. 교수들의 나태와 안일이 문제이므로 계약제·연봉제를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을 지고지선한 존재라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학생 교육에 대해서도 한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 교육에 대한 열정이 모자라면 그것을 강화시켜야 하고, 교육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개선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러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이 학관이나 '공부방'이 아니라면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서적, 문헌, 자료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 중에서 '독서실'을 넘어서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 학생들이 열람하고 대출하는 서적 중에서 소설류나 비학술 잡지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학생들의 탓인가, 아니면 교수들의 잘못 때문인가? 교수들이 게으르거나 교육에 열의가 없어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지 않아 '선진국'들과 달리 학생들이 놀고 지낸다고도 한다. 무슨 과제를 줄 수 있을까? 과거 초등학교에서 했듯이 교과서 옮겨 쓰기 숙제를 낼 것인가? 비교하기 즐겨 하는 선진국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여건이나마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교

수들의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다. 우리 대학의 여건이 이 지경인데도 해결은커녕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은(못한) 책임을 교수들이 회피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실험실습 교육은 어떠한가? 학생들의 이공계 분야 기피 현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여러 가지 진단과 처방이 제시되고 있지만, 필자는 실험실습 시설과 장비, 도구가 극히 열악한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물적 조건의 부실도 대학교육을 파행화하는 주요한 이유지만,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적 요건의 극단적 부실이다. 즉, '우수한' 교수를 논하기 전에 교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1980년대 이래 대학은 외형적 팽창을 거듭해 왔고, 그 결과 학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반면, 그들을 교육할 교수는 반대로 태부족이 되어 왔다. 그리하여 2002년 현재, 교수 충원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점진적이거나 개선되기는 커녕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 40명, 2년제 대학은 무려 80명인 것이 우리 대학의 현실이다. 이는 초·중등학교에 비해서도 훨씬 열악한 것이다. 따라서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40~80명인 조건에서 교육의 수월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거니와, 교수 계약제·연봉제가 교육 상황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잠꼬대로 들릴 수 밖에 없다.

작년 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제 5조의 2(대학 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의 3. 근무 조건에서 '교수시간'도 계약으로 정하도록 한 바, 지금까지 적용되던 책임교수시간 수를 훨씬 초과하는 교수시간 부과도 가능하게 되어 학생들의 교육 여건은 더욱 악화될 소지를 안게 되었다. 즉 교수 충원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어 교수 1인당 학

“

물적 조건의 부실도 대학교육을 파행화하는 주요한 이유지만,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적 요건의 극단적 부실이다.
 즉, '우수한' 교수를 논하기 전에 교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40~80명인 조건에서 교육의 수월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거니와, 교수 계약제·연봉제가
 교육 상황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잠꼬대로 들릴 수 밖에 없다.

”

생 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진정으로 대학교육 환경의 개선을 생각한다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수 증원 문제는 공염불이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로써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할 여지도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Ⅲ. 우리나라 대학과 교수의 연구 능력

교육보다도 우리나라 대학과 교수들에게 매도가 더욱 더 집중되는 지점이 연구 분야이다. 과연 우리 대학과 교수들은 그러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가? 최근의 보도("국내 SCI 논문 증가율 세계 1위", 서울/연합뉴스 4월 4일자)를 보자.

『지난해 과학기술분야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 증가율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 국내 대학 전체 순위는 전년도의 16위에서 14위로 2계단 상승했고, 국내 1위인 서울대는 세계 55위에서 40위로 꺾충 뛰어올랐다. 4일 교육인적 자원부가 포항공대에 의뢰해 입수한 "2001년 국제 SCI(과학논문인용색인) 지수"에서 국내 대학들은 2001년 한해 동안 전년도보다 17.9% 늘어난 1만 4,162건의 논문을 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수록, 1999년, 2000년 연속 16위였던 국가 순위가 14위

로 상승했고 논문 수 증가율로는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대는 2000년보다 387건 늘어난 2,589건의 논문을 SCI 등재 학술지에 실어 국내 1위, 세계 40위를 차지했다. 서울대는 1997년 126위에 머물렀으나 '98년 94위, '99년 73위, 2000년 55위, 2001년에 44위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1,178건)은 전년도보다 순위가 5계단 낮아진 165위였으나, 연세대(1,147건)는 222위에서 169위로 53계단, 성균관대(761건)는 336위에서 273위로 63계단 각각 상승했다. 포항공대는 341위에서 278위, 고려대는 333위에서 281위, 한양대는 382위에서 289위, 경북대는 419위에서 382위, 부산대는 452위에서 431위, 전남대는 461위에서 434위로 상승하는 등 국내 대학의 SCI 순위가 최고 93계단까지 대폭 상승했다. SCI는 미국 민간연구소인 미국과학정보연구소(ISI)가 과학기술분야 중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 각국 과학기술 연구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대학의 교수 1인당 논문 수는 광주과학기술원(KJIST)이 1위(5.32건), 포항공대 2위(3.80건), KAIST 3위(3.73건), 서울대 4위(2.66건) 순이었다. 우리나라 인구 1만 명 당 SCI 순위는 전년도 29위(2.56건)에서 2계단 상승한 27위(3.01건)로 총 논문 수를 기준으로 한 순위보다는 떨어졌다. 한편 국내 대학

의 SCI 순위가 올라가긴 했지만 논문 수를 국제 수준과 비교하면 1위인 미국(28만 4,024건)의 20분의 1에 불과하고 2위 영국(7만 2,368건), 3위 일본(7만 1,976건)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 여전히 차이가 컸다. 대학별 순위는 하버드대(9,218건) 1위, 도쿄대(6,439건) 2위, UCLA(5,343건) 3위, 워싱턴대(5,054건) 4위, 존스홉킨스대(4,991건) 5위, 토론토대(4,633건) 6위 순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내 대학의 SCI 순위가 올라간 것은 두뇌한국(BK)21 사업 등으로 대학에 대한 연구비 투자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국내 전체 SCI 논문의 82%를 생산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정부 연구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SCI 순위를 연구 실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데에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편이지만, 지금까지의 논의와 비난이 SCI 순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므로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SCI 순위는 세계 14위이며 서울대학교는 40위인 바, 이것은 연구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더라도 결코 초라하지 않은 실적이다. 교수 수, 교수들의 연구를 돕는 연구원 수, 재정지원 등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교수들의 과중한 교육 부담과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행정 잡무', 그리고 국가와 대학들의 학문과 연구의 역사적 축적 정도를 고려한다면 '치나치게 높은 실적'으로 오히려 우려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연구 실적과 연구비 투자가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가 말하듯이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지만, 불과 몇 해 동안의 투자 증가(그레 봐야 우리나라 전체 연구비 액수는 세계 톱 랭크 대학 하나에도 훨씬 못 미친다.)로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둔 것은 기뻐할 일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단기적인 성과 올리기에 집착하여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연구 능력 제고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교수 계약제·연봉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그 동안 연구 능력이 떨어진다며 일방적으로 매도되어 온 우리나라 대학과 교수들이 그 부당한 혐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2001년 국제 SCI(과학논문인용색인) 지수"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IV. 왜곡된 대학 지배 구조

필자는 우리나라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교육과 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매우 부진했던 점과 더불어, 아니 그에 앞서서 왜곡된 대학 지배 구조를 꼽는다. 왜냐하면 대학의 지배 구조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대학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 심지어 문제의 식조차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교육당국과 사립대학 재단들이 대학을 지원하되 지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원에는 지극히 인색하면서 일방적이고 전횡적인 지배만을 피해 온 것이다. 일부 사립대학 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마저 전용, 착복하는 범행까지 자행하여 왔다. 또 그러한 부당함에 저항하고 항의하는 교수, 학생, 직원들을 학원 밖으로 추방하는 만행조차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정당한 교수들에 맞서도록, 또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전혀 자격이 없는 자신들의 심복을 교수로 채용하기도 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교수 임용제 도리는 것은 허울뿐인 것이다.

그 동안 대학의 자율성 신장은 교육인적자원부

“

비람직한 교수 임용제도는 기술적·기능적인 접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대학의 지배 구조를 민주화시킬 때만 비로소 도출될 수 있으며 그 제도의 운영도 가능하다.
교수 계약제·연봉제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

의 구두선일 뿐이었으며, 자율권이 있다면 사립대학 재단들만의 것이었다.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치를 부정하였으며, 대학에 대한 사립대학 재단들의 전횡을 묵인하고 허용, 방조하는 도구일 따름이었다.

교육 당국은 이렇게 대학에 수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해 온 대학의 왜곡된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는 커녕, 또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려는 대학 구성원들의 정당한 외침을 경청하기는커녕, 스스로와 사립대학 재단들의 대학에 대한 일방적 지배권을 더욱 강화해 올 뿐이었다.

V. 맺음말

필자는, 그리고 우리 교수 단체들은 교수 계약제·연봉제를 왜곡된 대학 지배 구조를 더욱 악화, 심화시키는 치밀하게 의도된 장치일 뿐이라고 판단한다. 그것은 지난 3년여 동안의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기만적이었거니와, 교육공무원법(1999. 1. 29)보다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이, 임용령이나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2001. 12. 31)보다 개개 대학의 임용 규정과 그 시행이 더욱 더 교수들을 옥죄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더라도 자명하다.

여러 실례를 제시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재직

중인 교수에 대한 부분만을 살펴보자.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은 부칙 ④(계약제 임용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 5조의 2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신규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조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조항에 따라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2001. 12. 31)은 제 3조(근무 기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학 교원의 근무 기간(종전의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또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5조의 2의 규정 또는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정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수 : 교육공무원법 제 47조 또는 학교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 교육공무원법 제 47조 또는 학교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거나 6년 내지 10년 범위내의 기간
3. 조교수 : 4년 이내
4. 전임강사 : 2년 이내』

즉, 기왕에 재직 중인 교수는 계약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것은 1월 15일 환원상 전 교육 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수단체 대표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거듭 그 효력을 확인하였던 바 있다. 그런데 임용령과 임용지침에 의거해서 마련했다는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 규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둔갑되어 있다.

『제 3조(계약제 임용 등) ① 전임교수 임용 기간은 다음의 범위안에서 정하여 행한다.

1. 교수 : 교육공무원법 제 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교수로 승진하거나 신규로 임용될 때 본인이 원할 경우 6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정년 보장 임용된 때에는 계약임용으로 변경할 수 없다.
2. 부교수 : 6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 및 학술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현저히 있을 경우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조교수 : 4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4. 전임강사 : 2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그리고 부칙 ②(이 규정 개정시의 전임교수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규정 개정 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수를 2002년 9월 1일 이전에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다."라고 하였다. 즉 9월 1일 이후에는 기존 교수에게도 계약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개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부칙 ②에도 어긋나는데도, 지난 3월 1일자로 재임용된 교수들에게 이미 계약제를 적용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계약제를 신규 교수에게는 적용해도 되지만, 기존 교수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다. 다만 이 계약제를 둘러싼 교

육 당국과 대학 당국의 기만성을 보이려는 것이다.

교수 계약제·연봉제는 교수 개개인들의 고용 조건·노동 조건·근무 조건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더욱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왜곡된 대학 지배 구조에 맞서 싸워 그것을 개혁할 수 있는 대학교수들의 힘을 무력화·형해화시키고, 그들을 파편화·원자화시키는 불순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필자는 교수 계약제·연봉제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점이 기술적·기능적인 차원에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문제는 구조적이고 정치(권력)적인 것에 있다. 재정경제 당국이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잘못된 경제 구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애꿎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듯이, 대학의 문제를 잘못된 대학 지배 구조와 정부의 책임 방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교수들에게 책임을 덧씌우며 자신들의 잘못을 교수 계약제·연봉제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교수 임용제도는 기술적·기능적인 접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대학의 지배 구조를 민주화시킬 때만 비로소 도출될 수 있으며 그 제도의 운영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교수 계약제·연봉제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필자**

황상의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의학과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UCSF 의화학연구소 visiting scholar로 활동했다.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로서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한국과학사학회 부회장, 대한의사학회 부회장, 남북보건 의료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역사와 사회 속의 의학』, 『세계의학의 역사』(역), 『철단의학시대에는 역사시계가 멈추는가』 외 다수가 있다.